

전북자치도, 품격 있는 건축환경 만든다

주거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구도심 도시재생으로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원년을 맞아 도민 주거 안정 및 품격있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더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보증을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지원 △청년과 중소기업 맞춤형 주택 공급 △도시재생과 멋스러운 도시 공간 구성 등 실행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미혼 청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혼인신고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8~39세 미혼 청년은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10년(신혼부부·

청년 6년, 1자녀 8년, 2자녀 이상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총 438가구에 무이자 88억원을 지원(용자)할 계획으로, 조건에 따라 2~4회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급여 제도의 지원대상이 확대(중위소득 47%→48%, 4인 가구 기준 월 275만원)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된다.

이에 올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보다 매월 2만4,000원 상승한 27만8,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5만3,500여 가구에 1,1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도 한다.

2023년에 저소득 청년에게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부터

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저소득 소득요건도 완화해(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D)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총 3,300여가구에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반환 소송비용 일부(최대 140만원)와 경·공매 대항 수수료(본인부담 30%, 최대 3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공급한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돼 국비 47억원과 주택도시보증기금 50억원을 확보해 카페형 코워킹 스페이스, 그린 휴게공간, 회의공간, 사무실 등 지원시설을 1층과 2층에 설치하고, 창업인 등을 위한 주거침실형 주택 70호를 2026년까지 공급 예정이다.

올해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맞

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활성화와 인구소멸 대응 뿐만 아니라 더 특별한 건축환경을 조성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에서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 지역특화재생 2개소, 도시재생 인정사업 1개소 등 5개소가 선정돼 국비 395억원을 확보하는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멋스러운 도시공간 구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건축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를 수 있는 실천적인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과, 더 좋은 건축디자인으로 품질과 품격을 향상시킨다.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건축물 건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해 지역의 건축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4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9억원을 확보했으며 24년에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작

전북자치도, 지역활력 이끌 청년공동체 15개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4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함께 할 청년공동체 15개팀을 최종 선정하고, 27일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를 발굴·육성해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 마련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청년공동체를 모집한 결과 총 62개 팀이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팀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의 정체성 파악을 위한 이야기 유산 발굴 및 조사 △청년예술가 교류사업을 기반으로 한 음악 예술인 양성 △청년 농부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꿈을 펼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청년공동체의 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팀당 900만원의 과업 수행비와 활동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공동체간 네트워크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청년공동체 지정서 수여와 함께 공동체의 정보 공유를 위해 작년 우수 청년공동체의 활동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단체들이 방향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별 컨설팅을 실시했다.

청년공동체 활동은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며, 팀별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주요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 팀에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활동 주체로서 성장하고 지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국회, 국립의전원법·지역의사제법 즉각 처리하라”

도의회 환경복지위·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와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7일 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전원법 및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 계류기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던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부의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린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안에는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필수·지역 의료인력의 활용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양성과 배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증원 논의의 출발점인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27일 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표류해 온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정부와 정치권에 막혀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

과 건강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명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 활용 방안이 빠져있음에 따라, 필수의료인력 부족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전원법 및 지역의사제법 통과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협업 강화

도-도의회-대학-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지원협의체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회의실에서 도와 대학의 협업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자치도의회 및 도내대학 국제교류위원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학생 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2월 협의체 회의를 가동했다.

전북자치도는 협의체를 통해 도내 대학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결과 보고와 2024년도 유학생 유치 공모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도내 소재 대학과 더불어 해외 유학생명

회 추진방안 및 전북형 늘봄학교 협력 방안, 외국인 유학생 비자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전북자치도의 가장 큰 방향은 도와 대학 간 협업 강화이다.

도는 그동안 유학생 유치를 대학의 고유영역이라고 판단해 대학을 지원하는 역할에 치중했으나 올해는 대학과의 협업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주에는 2024년도 글로벌대학30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대학 총장과 사전 간담회를 갖는 등 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지원 예산이 2018년부터 5년간 1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설명회·박람회 개최 협의 △전북형 늘봄학교 협력방안 논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특례(2차) 발굴 등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김재훈 기자